

이슈브리프 868호
(2026. 7.21)

美 태평양사령부(USPACOM) 명칭 변경의 안보전략적 함의

제868호

하경석 haks@inss.re.kr



국문초록

2026년 6월, 미 전쟁부(DoW)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의 명칭을 태평양사령부(PACOM)로 복귀한다고 발표하였다. 전쟁부의 공식 발표는 이번 조치가 1947년 창설된 태평양사령부의 역사적 유산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태평양사령부의 책임구역은 미 서부 해안 수역에서 인도 서부 국경까지 기존과 같이 유지되며 기본 임무도 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조치는 근본적인 변화라기 보다는 미 국방전략의 우선순위 변화를 반영하는 전략적 표현의 변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태평양사령부 명칭의 복귀는 미국 인도태평양 전략의 폐기라기보다, 외교적 차원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은 유지하면서 군사작전 차원의 초점은 서태평양, 제1도련선, 대만해협, 일본-필리핀 축으로 압축되는 현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는 트럼프 2기 국가안보전략(NSS)과 국방전략(NDS)이 제시한 본토·서반구 우선, 제1도련선에서의 거부에 의한 억제, 동맹 부담분담, 방위산업 기반 동원이라는 기조와 맞물려 있다. 인도는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중심축에서 기능적·자율적 파트너로 재배치되고 있으며, 한국은 북한 억제의 1차 책임과 태평양 억제망의 산업·군수·정비·정보 기반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요구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중국 마찰에의 연루,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 방위비 압박이라는 리스크에 대비하는 동시에 조선·MRO·탄약·방공·우주·사이버 역량을 활용해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높여야 한다.

키워드: 미 태평양사령부(USPACOM), 인도태평양, 한미동맹, 전략적 유연성, 방위산업기반(DIB)

美 태평양사령부 명칭 복귀의 의의

2026년 6월 16일, 미 전쟁부(DoW)는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의 명칭을 태평양사령부(PACOM)로 공식 복원한다고 발표하였다. 발표문은 태평양사령부가 1947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 시기 창설된 미국의 가장 오래되고 큰 통합전투사령부라는 점, 그리고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을 포함하여 전후 아시아 안보질서 구축에 기여해온 역사적 유산을 강조하였다.¹⁾ 동시에 명칭 변경에 따른 임무 변경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태평양사령부의 책임구역은 “미국 서부 해안 수역에서 인도 서부 국경까지” 인도태평양사령부의 기존 임무 그대로 유지되며, 동맹·파트너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전구를 유지한다는 기본 임무 역시 변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²⁾ 즉, 현 시점에서 태평양사령부 명칭 복원은 작전구역 변경이나 사령부 구조의 변화라기보다 트럼프 행정부 차원의 전략적이고 상징적인 조치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태평양사령부 명칭 복원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2018년 인도태평양사령부(INDOPACOM)로의 개칭이 단순한 행정상의 변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매티스(James Mattis) 국방장관은 “인도양과 태평양의 증가하는 연결성”을 반영해 태평양사령부를 인도태평양사령부로 바꾼다고 밝혔다. 그는 인태지역을 “발리우드에서 할리우드까지, 펭귄에서 북극곰까지” 포괄하는 광대한 공간으로 묘사했고, 중국의 일대일로 등을 통한 강압적 경제정책을 암시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자유롭고 개방된 지역질서를 강조한 바 있다.³⁾

1) US Pacific Command, “Department of War Restores U.S. Pacific Command Designation” (16 June 2026).

2) 실제 법적인 측면에서도 태평양사령부는 아직 보조적인 명칭으로 사용되며, 공식적인 명칭 복귀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쟁부(DoW)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나 법적으로는 국방부(DoD)인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상 인태사령부(INDOPACOM) 명칭은 여전히 유효하다.

3) Jim Garamone, “Pacific Command Change Highlights Growing Importance of Indian Ocean Area,” DOD News (30 May 2018).

2018년에 ‘인도-태평양(Indo-Pacific)’ 이 강조된 이유는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해양진출을 서태평양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양까지 이어지는 전략적 도전으로 보겠다는 선언이었다. 둘째, 인도를 미국의 대중국 견제전략 안으로 끌어들이는 정치적 신호였다. 셋째, 미국·호주·일본·인도의 쿼드(QUAD), 동남아 해양국가, 인도양 연안국을 하나의 전략지도 위에 배치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전략적 의의를 갖는 인도태평양사령부 개칭이었기에, 2026년 태평양사령부(PACOM)로의 변경도 단순한 명칭 복원으로만 볼 수 없다. 핵심은 미 전쟁부가 상정하는 잠재적 군사적 충돌의 공간을 어디로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군사 작전상의 ‘태평양’ 과 외교 공간으로서의 ‘인도-태평양’ 의 분화

태평양사령부(PACOM) 명칭 복귀를 미국 대외전략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개념의 폐기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외교 공간으로서의 인도태평양과 군사 작전상의 지역 개념으로서 태평양이 분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실제 미 트럼프 행정부는 태평양사령부 명칭 변경 이후에도 인도태평양이라는 지역개념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6년 7월 6일 태평양사령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보도자료에는 미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약을 심화했다고 표현했다.⁴⁾ 2026 미 국방전략(NDS)에서도 대중국 군사전략을 “인도태평양에서 힘을 통한 억제, 불필요한 대결이 아닌 억제”로 표현하면서, 제1도련선(FIC)에서 강력한 거부에 의한 억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명칭 복원으로 인해 군사작전상의 지역 개념은 분명히 좁아진 것이 사실이다. 전쟁부 헤그세스 장관은 2026년 상그릴라

4) US Pacific Command, “U.S. forces strengthen Pacific security partnerships at CARAT Thailand 2026” (6 July 2026).

대화 연설에서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며, 미국은 “태평양 국가”이며 미국은 제1도련선을 기준으로 거부에 의한 억제에 중심을 둔다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은 서반구에서 이른바 트럼프식 먼로 독트린을 재정립하면서도, 서태평양에서는 침략이 불가능하고 확전이 매력적이지 않으며 전쟁이 비합리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강력한 거부방어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⁵⁾

이러한 표현의 변화는 2026 국방전략(NDS)의 구조와 일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국방전략에 따르면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중국에 대해서는 제1도련선에서의 거부방어를 핵심으로 하며, 동맹국에는 더 큰 부담과 책임을 요구하고, 이 모든 것을 방위 산업기반(DIB)의 국가적 동원으로 뒷받침하려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태평양사령부 명칭의 복귀는 미국의 전략지도가 넓은 인도태평양 전체를 균등하게 포괄하는 방식에서, 서태평양과 제1도련선을 중심으로 우선 순위를 재배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미국은 여전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인도양과 남아시아, 동남아, 호주, 태평양 도서국, 한국과 일본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태평양 사령부 명칭 복귀를 통해 모든 지역을 같은 전략적 밀도로 다루지는 않겠다는 의지는 확인할 수 있다. 외교와 경제·기술·공급망의 공간으로서 ‘인도-태평양’은 유지되지만, 전쟁계획과 군사태세의 언어로서 ‘태평양’이 재부상했다는 점이 이번 명칭 변경의 중요한 전략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5) US Department of War, “Remarks by Secretary of War Pete Hegseth at the 2026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30 May 2026).

태평양사령부 명칭 복원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

이번 명칭 변경을 둘러싼 전문가 해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첫째는 역사·상징 복원론이다. 전쟁부는 공식 발표에서 1947년 창설된 태평양사령부의 전통과 자부심을 강조했고, 호주전략정책연구소(ASPI)도 명칭 변경의 한 이유로 역사적 명칭 복원과 헤그세스 장관의 군 명칭 복원식 브랜딩을 지적한다. 동시에 ASPI는 작전구역과 병력 재배치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과도하게 실질적 변화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분석하였다.⁶⁾

둘째는 대중국 작전공간 명료화론이다. 미 허드슨연구소는 이번 조치가 중국과의 경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어디에서는 벌어지지 않을지를 명확히 하는 조치라고 해석한다. 미국의 주(主) 전장은 인도양이 아니라 대만해협, 일본, 필리핀, 제1도련선이며, 한국은 북한 억제, 유럽은 러시아 억제를, 인도는 인도양 관리를 더 많이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⁷⁾ 미 켄시연구소의 시도어(Sarang Shidore) 역시 태평양사령부 복귀를 ‘넓은 인도태평양’에서 ‘제1도련선’으로의 전략적 조정으로 보며, 쿼드보다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스쿼드(SQUAD)가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한다.⁸⁾

셋째는 인도 및 쿼드의 가치 손상론이다. 스웨덴 국제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의 판다(Jagannath Panda)는 ‘인도(Indo)’ 용어 삭제가 미·인도 전략관계를 악화시키는 실수라고 본다. 그에게 인도태평양이라는 개념은

6) Colin Karotam, “The likely reasons for INDOPACOM becoming PACOM again,” The Strategist,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18 June 2026).

7) Ken Moriyasu, “Why Dropping “Indo-Pacific” Clarifies the Pentagon’s China Strategy,” Commentary, Hudson Institute (18 June 2026).

8) Sarang Shidore, “Goodbye Indo-Pacific, Hello First Island Chain!” Responsible Statecraft (7 July 2026).

인도를 아시아 전략지리의 필수 행위자로 인정한 결과였으며, 이를 제거하는 것은 인도의 역할을 부차적이거나 선택적인 것으로 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한다.⁹⁾ 스타브리디스(James Stavridis) 전 NATO 연합군 최고사령관도 이번 조치가 인도에는 직접적인 타격처럼 보일 수 있고, 역내 파트너들에게 인도태평양 개념의 평가절하로 읽힐 수 있다고 비판했다.¹⁰⁾

본고의 판단은 세 견해를 종합하되, 두 번째 대중국 작전 명료화라는 해석에 가장 큰 무게를 둔다. 역사 복원론은 공식 설명으로는 적절해 보이나 미국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하지는 못한다. 인도 가치 손상론은 외교적 비용을 지적한다는 점에서 중요하지만, 인도 배제론으로 나아가면 사실관계를 과장하는 측면이 있다. 실제 주인도 미국대사 고르(Sergio Gor)는 6월 30일 “문서의 이름보다 실제 협력이 중요하다” 며 미·인도 관계가 국방·무역·인적 교류에서 견고하다고 강조했고, 인도가 미국과 가장 많은 군사훈련을 하는 국가라고 인도 측에 소명하였다.¹¹⁾

따라서 보다 정확한 표현은 인도 배제가 아니라 인도의 ‘전략적 탈중심화’가 될 수 있다. 인도는 더 이상 미국의 대만해협과 제1도련선 작전구상에서 상징적 중심축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도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군수·정비·공동생산을 통해 미국의 부담을 나누는 기능적·자율적 파트너로서는 여전히 중요하다. 헤그세스 장관도 상그릴라 연설에서 인도를 남아시아의 핵심 축이자 인도양에서 안보 부담을 지는 파트너로 언급하고, 미 해군 함정 정비·지원 및 재블린(Javelin) 대전차의 공동생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9) Jagannath Panda, “Why It’s a Mistake to Drop the ‘Indo’ from Indo-Pacific,” *The National Interest* (25 June, 2026).

10) James Stavridis, “Pentagon’s Indo-Pacific Name Change Hurts the US and India” *Bloomberg* (26 June 2026).

11) “US envoy says India ties stay strong despite Indo-Pacific Command rename” *INDIA Today* (30 June 2026).

인도양·중동 전구와 태평양 전구의 분리

태평양사령부 명칭 복귀의 또 다른 의미는 인도양과 중동 전구를 서태평양 전구와 더 선명하게 분리하려는 움직임이다. 미국이 인도양을 포기하는 행보로 보기는 어렵고, 실제 공식 작전구역도 인도 서부 국경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중국과의 고강도 군사충돌에서 미국이 직접 결전을 벌일 핵심 공간은 인도양이 아니라 서태평양이라는 메시지는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2026 국방전략의 대중동 접근과도 연결된다. 국방전략에서는 중동의 평화와 번영이 지역 당사자, 즉 이스라엘과 걸프 파트너 등 지역 동맹의 책임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고, 미국은 결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집중적 관여(focused engagement)”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에서 장기적 지상개입이나 과도한 상시 개입을 피하고, 고급 군사자산은 중국 억제에 필요한 서태평양으로 돌리려는 흐름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전력소모 문제도 이러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미 전략국제연구소(CSIS)는 이란전쟁 이후 미국이 장거리정밀타격, 방공요격탄, 함정·항공기 정비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고, 특히 토마호크, 패트리엇, JASSM, THAAD 등은 서태평양 유사시에도 핵심적인 전력이라고 평가했다.¹²⁾ 미국이 중국과의 장기전 또는 두 개 전구 동시전쟁을 수행하기에는 장거리탄약과 방공자산, 무인체계, 유지정비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른 보고서에서는 이란전쟁 39일 동안 7종 핵심탄약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었고, 일부는 전쟁 전 재고의 절반 이상이 소모되었으며, 재고 회복에는 1~4년이 걸릴 수 있다고 평가하였다.¹³⁾

12) Seth G. Jones, “Is the United States Prepared for a War with China?”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2 May 2026).

13) Mark F. Cancian and Chris H. Park, “Last Rounds? Status of Key Munitions at the Iran War

이러한 조건 하에서 미국은 중동·인도양·서태평양을 모두 같은 강도로 직접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은 인도양과 중동에서 지역 파트너의 책임을 확대하고, 미국의 국방력은 제1도련선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거부에 의한 억제력을 달성하는 데 집중하려 한다. 태평양사령부 복귀는 이 전략적 선택의 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전략적 함의: 한반도 안정과 태평양 억제의 점점

미 태평양사령부 명칭 복귀는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작전적으로 재정의한다. 미국이 서태평양과 제1도련선에 집중할수록, 한반도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미국의 대중국 억제전략 자체를 뒷받침하는 조건이 되기 때문이다. 대만해협 위기와 한반도 위기는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은 미국의 제1도련선 작전 여지를 제약할 수 있고, 중국은 한국의 미사일방어·정보감시·군수지원·기지운용을 대중국 포위망의 일부로 인식할 수 있다.

2026 미 국방전략은 이 점을 매우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문서는 한국이 강력한 군, 높은 국방비, 견고한 방위산업, 징병제를 갖추고 있으므로 북한 억제의 1차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미국은 핵심적이지만 더 제한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힌다. 또한 이러한 책임분담의 변화는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려는 미국의 이해와 부합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한미동맹의 약화를 뜻한다기보다, 재래식 방위의 한국 책임 확대와 미국 전략자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동시에 추진될 수 있음을 뜻한다.

헤그세스 장관도 상그릴라 연설에서 한국을 방위분담의 대표 사례로 먼저 언급하며, 한국은 “전선에 살고 있기 때문에(live on the front lines)” 실제 전투력을 구축한다고 평가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방위 책임 확대 결정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였다.¹⁴⁾ 이는 한국이 미국의 시각에서 단순한 한반도 방위 수혜국이 아니라, 태평양 전략에서 부담을 나눌 수 있는 모범 동맹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한국에 세 가지 리스크를 제기한다. 첫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미군 일부 전력이 대만해협 또는 남중국해 위기에 활용될 수 있다는 논의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했으나, 태평양사령부 복귀와 2026 국방전략은 이를 더 구조화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반도 방위에서 한국군의 1차 책임이 강조될수록 확장억제의 신뢰성, 특히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디커플링 우려가 커질 수 있다. 셋째, 한국이 서태평양 억제망에 더 깊이 연결될수록 중국과의 불필요한 마찰과 경제·외교·사이버·회색지대 압박 가능성도 커진다.

동시에 기회도 상존한다. 미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전쟁지속능력으로 헤그세스 장관도 “더 많은 회의가 아니라 더 많은 함정과 잠수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모범 동맹에는 신속한 무기판매, 방위산업 협력, 정보공유를 우선 제공할 것이라고 상그릴라 대화에서 밝힌 바 있다. 한국은 조선, 함정 MRO, 탄약, 미사일, 방공, 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우주감시, AI 지휘통제 분야에서 미국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동맹국이다. 이는 한미동맹의 비용문제를 동맹 간 협상 레버리지와 산업 전략의 문제로 전환할 수 있는 지점이다. 미 조야에서도 북한 억제와

14) US Department of War, “Remarks by Secretary of War Pete Hegseth at the 2026 Shangri-La Dialogue in Singapore” (30 May 2026).

중국 억제를 더 이상 분리된 과제로 보지 않는 흐름이 뚜렷해진 가운데, 미국의 동맹체제 안에서 역내 한국의 역할을 제고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¹⁵⁾

정책적 대응 방향

첫째, 한국은 한반도 안정이 미국의 태평양 전략에 기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대만해협 유사시 한국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전투병력 파견이 아니라 북한의 기회주의적 도발을 억제해 미국이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소극적 기여가 아니라 태평양 억제의 북방 안정축 역할이다.

둘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은 무조건 거부하거나 무조건 수용할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 논의를 현실로 인정하되, 그 조건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전협의를, 위기별 역할분담, 미군 전력 이동 시 대체전력 보강, 탄약·방공자산 사전비축, 기지방호, 확장억제 절차 강화가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 국가안보실과 군사당국자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과 조건을 논의할 수 있는 상시 채널 구축이 중요하다.

셋째, 확장억제와 한국형 재래식 억제를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 미국이 한국의 1차 방위책임을 강조할수록 한국은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장사정포 대응, 사이버·우주 감시정찰, AI 기반 지휘통제 역량을 더 빠르게 확충해야 한다. 동시에 미국의 핵우산, 전략자산 전개, 핵협의 절차, 위기 시 공동기획을 제도화해 디커플링 우려를 낮춰야

15) 이러한 논지는 아틀란틱카운슬의 ‘동북아 사령부’ 구상에서도 드러난다. Christopher Lee, Ben Blane, and Markus Garlauskas, “The Case for a US Northeast Asia Command” Atlantic Council (18 June 2026).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2025 한미 Joint Fact Sheet에 명문화한 핵추진 잠수함 협력 이행을 통해 외부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넷째, 방위산업기반(DIB)을 동맹의 전략자산으로 격상해야 한다. 미국은 국방전략을 통해 자국 방위산업기반을 국가적 동원 수준으로 복원하려 하면서도, 동맹·파트너 생산능력을 활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은 미 해군 함정 MRO, 탄약 공동생산, 방공요격탄 생산, 군수허브, 항만·기지 복원력 분야에서 구체적 협력 패키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을 현물기여와 기술협력, 공동생산, 시장접근으로 전환하는 시너지 창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다섯째, 대중국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의 중국과의 잠재적 마찰에 자동 연루되지 않는다는 원칙과 북한 억제 및 태평양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한다는 원칙을 동시에 제시해야 한다. 정보·정비·군수·해양감시·사이버·공급망 안정 같은 후방·산업적 기여를 우선시하는 방식은 한미동맹의 신뢰를 높이면서도 대중국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여섯째, 한미일 협력을 한반도 방위와 연결된 실질적 의제로 좁혀야 한다. 태평양사령부 복귀 이후 일본·필리핀·호주 등 제1도련선 및 주변 동맹의 역할은 더 커질 것이다. 한국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하되, 미사일경보, 대잠전, 해양감시, 후방군수, 기지복원력, 사이버·우주 협력 등 한반도 방위와 직접 연결되는 분야로 설계해야 한다. 그래야 국내 정치적 지속성과 전략적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미 태평양사령부 명칭 복귀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군사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상징적 조치이다. 미국은 본토와 서반구를 최우선으로 두고, 인도태평양에서는 중국의 해양진출과 현상변경 시도를 제1도련선에서 거부하려 한다. 일본·필리핀·호주와 같은 동맹의 역할이 커지고, 한국은 북한 억제를 통해 태평양 작전의 북방 안정축을 제공하는 동시에 방위 산업·정비·탄약·정보·사이버·우주 역량을 통해 전쟁지속능력을 제공하는 동맹으로 재정의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 보다 한반도 방위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확장억제의 제도적 심화를 요구하며, 방산·조선·MRO·탄약·우주·사이버 역량을 동맹 협상의 전략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미국이 가져오는 변화를 리스크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동맹 현대화와 전략적 자율성 강화를 동시에 추진할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끝//

본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